



## 유엔과 山林保護

南 時 旭

작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환경보호를 위한 ‘리우선언’ 등 4개 의안과 21세기를 위한 그 구체적인 실천요강이라 할 ‘議題 21’(Agenda 21)을 채택했다.

4개 의안이란 ‘리우선언’이외에 기후변화협정과 생물다양성협정 등 2개의 조약과 ‘山林原則성명’이다. 이 ‘山林原則성명’은 ‘議題 21’의 제 11장 ‘산림황폐방지’(Combating Deforestation)와 제13장 ‘지속가능한 山地開發’(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의 두 문서와 함께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중요한 산림보호관련 문건은 물론 그 명칭이 말해주듯 ‘山林原則성명’과 ‘議題 21’ 자체는 앞에 언급한 두개의 협정과 달리 법적 강제성을 지닌 조약은 아니다. 그러나 유엔에서 결의되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인 합의사항이자 각국 원수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합의했다는 점에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공약이기도 하다.

또한 리우회의의 배경을 보면 이들 문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유엔이 최초로 본격적인 환경관계회의를 가진 것은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였다. 이때부터 꼭 20년간 꾸준한 노력끝에 유엔창설 45주년이 되는 작년에 리우에서 회동하여 역사적인 문서들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문건들은 앞으로 국제사회, 특히 유엔무대에서 산림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준거와

행동규범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산림보전을 포함한 환경보호는 정부차원이나 유엔같은 국제기구 뿐 아니라 민간차원과 비정부기구들의 국제적 연대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른 분야와 달리 환경문제야 말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의 환경단체들에게도 이들 문서는 참고 거리가 됨직하다.

### 生態系로서의 山林

리우회의가 채택한 ‘산림원칙성명’의 정식명칭은 ‘모든 형태의 산림의 관리 보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적 합의를 위한 원칙’(Principles for a global Consensus on the Managem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ll Types of Forests)으로 그 前文에 산림에 관한 기본적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산림의 문제는 모든 영역의 환경과 개발문제 및 그 가능성에 관련된다.

② 이들 원칙의 지도목표는 산림의 관리보전,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또한 산림의 다양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과 용도를 제공하는데 있다.

③ 산림문제와 가능성은 산림의 전통적 용도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과 용도, 그리고 이러한 용도가 제한될 때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긴장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의 관리로부터 제공되는 개발의 잠재성을 고려한 가운데 환경 및 개발의 전반적 연관위에서 전반적이고도 균형있는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상은 표현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를 요약하면 산림문제는 여타의 모든 환경과 개발에 직결되는 중요문제로서 이 문제의 접근은 환경과 개발의 균형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보호가 환경보전문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성격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중요성도 이에 비추어 그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議題 21’의 제11장 ‘산림황폐방지’에서는 모든 종류의 산림지역 및 산간지대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지속시키고 그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전과 훼손된 지역의 재녹화사업, 산림에서 나오는 제품의 효과적인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議題 21’ 제13장의 ‘지속가능한 산지개발’에서는 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은 물·에너지·생물학적 다양성의 원천이며 동시에 광물·산림제품·농업상품 및 여가생활의 중요자원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도 지구의 중요한 생태계인 산지환경은 날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지자원과 사회경제적 개발의 적절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을 제시했다.

○산지의 생태계 지식을 증진하기 위한 기존조직의 강화 또는 신규조직의 창설

○환경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영농 및 자연보호관행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유인책 실시

○산지지역의 종합적 관리와 조화되는 관광진흥을 통한 산지경제의 다양화

○대표적인 동식물 종류의 보존지구 설치

○특정한 산지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산림과 야생동물관리의 통합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오염통제를 증진할 대책 시행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현지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촉진하는 입법조치

## 價値觀 전환과 환경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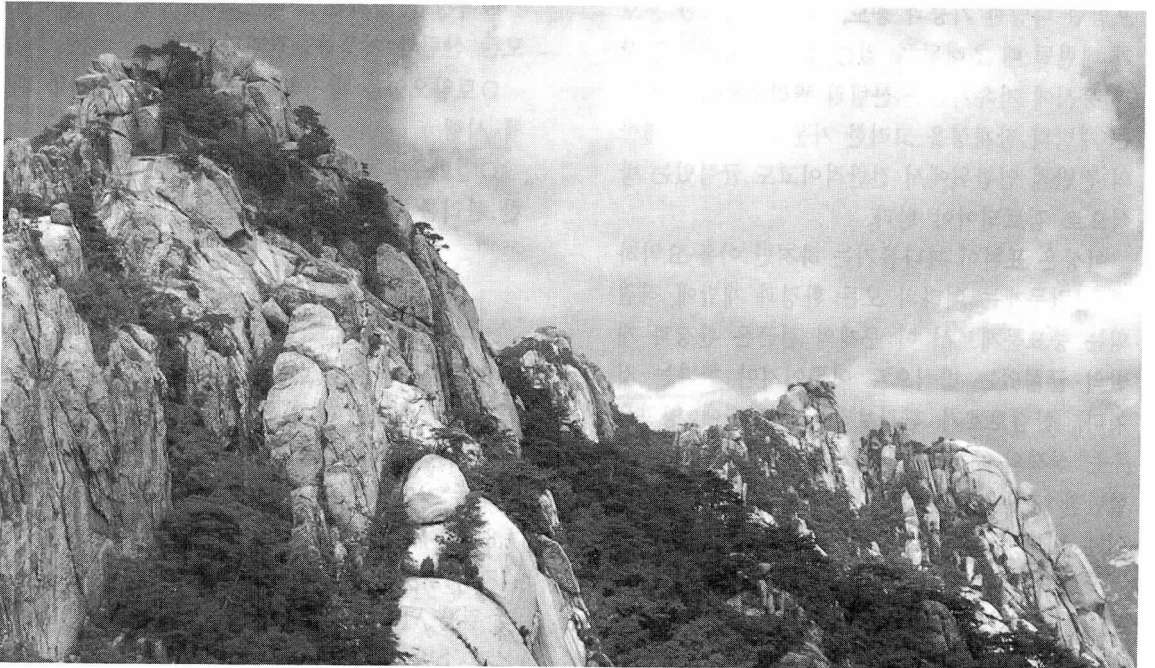
요즘 들어 환경보호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철학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영위해온 물질중심주의적 생활양식을 지양하도록 가치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인데 리우회의는 이 대목을 ‘리우선언’ 제8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모든 국민의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행태를 줄이고 없애야 하며 적절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대목은 우리나라에서의 산림보호운동, 특히 국립공원보전운동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들의 기본적 인식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지금까지와 같은 지속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양식을 止揚하지 않는 한 산림보호운동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국립공원을 포함한 모든 산림자원을 언제까지나 있는 그대로 두고 손가락 하나도 대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개발은 필요하며 또 불가피하다. 문제는 자연보전을 하면서 개발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시베리아에서 벌목 사업을 하다가 러시아당국으로부터 엄격한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벌목을 무계획적으로 하면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얼마 안되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멸종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벌목과 생태계 보호의 균형 문제다. 개발이 이처럼 종합적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우이암에서 본 도봉산능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개발과 자연보호의 균형은 커녕 완전한 자연파괴, 그것은 무지나 인식부족에서가 아니라 뻔히 잘못하는 줄 알면서 부정부패가 개재되어 일을 저지르는 산림훼손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는 제3공화국때 안보상 이유때문에 북한산 기슭을 깎아 주택지로 개발했다 한다. 그 정당성 여부는 여하간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그 근처의 구기동 일대는 그런 명분도 없이 최근까지 불법 개발로 말썽이 끊이지 않은 지역이다. 필자는 언젠가 구기동 기슭 깊숙히 자리잡은 불고기집에 가보고 어떻게 이런 곳에 건축허가를 내주었을까 하고 분노한 경험이 있다.

평창동과 구기동 일대는 다른 곳도 아닌 국립공원지대다. 북한산이야말로 수도 서울의 상징이다. 북한산 기슭이 행정당국의 태만내지 방조로 훼손되는 지경이니 서울의 여타지역은 물론이

고 다른 대도시의 녹지대가 온전할 수가 없다.

60년대초까지만 해도 도시행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 서울 시내, 특히 고지대의 녹지산지 등에 무허가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자연이 훼손되었다. 그중에서는 해방이후 6·25동란 전후까지의 혼란기에는 극심했다. 그 결과 이곳저곳에 지금 달동네라고 불리는 고지대의 주택가들이 생겨났었다. 그러나 기회있을 때마다 행정당국은 소위 양성화 조치라는 이름아래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옛날과 같은 행정공백상이 없는데도 자연상태로 보존되어야 할 고지대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부정행위이외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의 가치관 전환은 조그마한 것에서 부터 이루어져야 환경보호가 이룩될 것이다.

[필자 : 동아일보 상무이사]